

21세기 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 방향

장 성 자 (여성부 여성정책실장)

여성부가 출범한지 이제 9개월여가 되었습니다.

여성부가 공식 출범하기까지에는 많은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1세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이런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이 여성부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부터 시작된 정부 내 여성정책 추진의 노하우도 여성부가 무리 없이 탄생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부가 출범하게 된 21세기 초반 우리 한국사회의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의 후반인 1990년대부터 세계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국경 없는 자금의 흐름, 무역장벽의 제거 등 우리가 실물로 경험하는 세계의 활동영역을 넓힌 반면, 정보화는 그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윤희제인 동시에 개인과 사회조직의 활동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90년대 후반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IMF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견고한 질서가 무너지고 합리성과 개방성이 강화된 새로운 사회질서를 더 빨리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조정의 와중에 사회 각 부분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된 점도 우리에게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는 그가 사용하고 생산하는 디지털정보의 양과 질로 결정됩니다. 얼굴을 보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20세기까지의 인간관계와 조직논리는 이제 정보화의 흐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구조조정과 정보화라는 변화의 시기는 우리 여성들의 삶에 심각한 도전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정보가 권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입구에서 20세기

산업사회에서 세워졌던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시 자리매김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지식정보 사회에 부합하는 가치의 새로운 자리매김에서 앞으로 부각되는 명제는 이제 더 이상 산업사회를 이끄는 일차 종사자 남성과 보조자 여성의 역할분담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대면하고 육체적 힘을 써야만 인간관계의 형성과 경제·사회가치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계아래서는 상대방의 성별과 육체적 특성이 순서매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여성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그 기회를 놓쳐서 뒤처지게 되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글로벌시대, 지식정보사회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성인력의 활용만으로는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를 뛰어넘을 유일한 대안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발전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임무를 부여 받은 여성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가사회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두 배가 되면 결국 그 국가의 국력도 두 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나누는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능력발전이 필수적이며, 그런 여성발전이 남성발전과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흔히 여성문제의 해결을 남녀의 대결구도로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발전보다는 남성의 기득권을 빼앗아 여성의 몫을 늘리는 것이 남녀평등으로 오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부는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동반자인 남성들도 존중되고 행복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부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사회적 계층에 속해 있어서 여성의 문제가 평면적이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여성정책 대상인 엘리트 여성이나 소외계층 여성뿐 아니라 보통 여성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의 실현」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부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권의 향상에 정책추진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여성인력 개발

21세기는 정보사회이고 여성이 이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한

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하는 관건이 되므로 여성부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부 자체가 정부부처 중 가장 정보화 되고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가 바로 여성정보의 온라인 통로인 Women-net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일입니다. Women-net을 통해 여성사회교육,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킹, 각종 남녀차별 및 폭력에 관한 상담 등 주요 여성정책을 온라인상에 구현하여 정책입안주체인 여성부와 수요자인 여성들이 쌍방향으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성부가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한 분야가 IT분야 여성인력 교육사업입니다. 여성부는 현재 여성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여성인력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IT분야는 21세기의 가장 유망분야이기도 하고 정부자체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부나 노동부의 체계가 아닌 여성부가 특별히 IT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IT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은 주로 인문계 전공자가 많아 기존의 교육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에 여성인력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OECD 관련자료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7.4%에 불과하고 특히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5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성들은 정규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는 남성과 거의 동등하지만 학교졸업 후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결혼과 함께 주부로서 경제활동 무대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결혼과 출산절령기인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퇴직 등 아직도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없애고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성보호제도가 기업주에게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된다거나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반발이 있지만 모성보호가 결국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합리적인 원칙들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여성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2001년 11월부터 실시되는 모성보호관련법은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함께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또 다른 형태인 자원봉사활동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여성부는 자원봉사활동이 단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전업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하나의 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그 활동을 계기로 다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여성부는 여성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전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1월부터 자원봉사자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자원활동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족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호주제의 존폐 또는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호주제의 폐해를 들어 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또 사회 일부에서는 호주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호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활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여성개발원을 통해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모델이 개발되면 이의 GDP 산입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 여성권의 향상

여성권의 증진과 관련하여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업무와 기존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성희롱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부 출범과 함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남녀차별피해 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하게 된 것을 계기로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건별 주심위원 선정 및 분과위원회체제 도입 등 차별사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실현할 것입니다.

성희롱예방과 관련하여는 강사은행소속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체계가 정착되도록 성희롱예방 전담창구 및 상담요원을 지정하는 등 세 부운영지침 마련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보호업무는 과거 복지부가 담당했을 때는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저희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수호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우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 폭력의 제지뿐 아니라 긴급피난, 상담, 의료, 그리고 법률구조에 이르기까지 one-stop 보호망을 갖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이 피해자 구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연결하여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8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증언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민 모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 추진체계 확립

여성부는 앞서의 여성인력개발과 여성권익증진이라는 여성정책의 주요 추진방향 이외에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내,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정책연계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여성에 대한 각종 기초조사와 지표개발에도 힘을 쓸 것입니다.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는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을 관장하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어진 기능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본시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여성정책협조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의 추진과제가 많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에는 그 부처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부는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여성정책 협력을 위하여 각 부처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망라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해당부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총책임을 맡는 동시에 부처의 정책수립 시 남녀 평등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부처간 중첩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여성정책책임관과 기존 6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의 임무에 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전면 개정할 예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여성정책 담당기구로는 과거 가정복지국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통폐합되어 각 단체마다 다른 명칭과 조직형태를 가지고 여성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및 일하는 여성의 집 등 법령에 의해 여성부의

일부 권한이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가 있고, 일부는 여성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여성부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정책연계를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는 여성관련 업무의 내용과 담당조직을 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자치단체업무평가에 여성정책관련 지표를 포함시켜 여성정책의 지역확산에 필요한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또한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부여된 중요한 임무이자 권한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성인지적 정책분석·평가란 남녀간의 삶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문제가 일상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런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년에 여성부는 국가 정책의 성평등적 평가지표 등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몇 가지 주요 정부정책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의 영향은 부처별로 집계되어 발표되는 통계자료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처별 통계자료에 성별 분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여성관련 지표가 반영되도록 성인지적 통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책의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정책은 여성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정부의 전부처가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정부기관 뿐만 아닙니다. 모든 여성, 나아가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